

Hansun Brief

발행일: 2017년 9월 28일(통권49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보수의 반성과 우파의 혁신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11주년 기념식 발제문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요약

보수진영의 치열한 자성과 환골탈태가 절실하다. 우선 보수의 공(功)은 계승하되 과(過)를 바로잡아야 한다. 보수의 업적은 세 가지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근대국가 수립, 둘째, 압축 산업화에 따른 절대빈곤 탈출, 분배 개선과 중산층 형성, 셋째, 절차민주주의 확립과 세계화다. 반면에 보수진영은 권위주의 통치와 정부 주도의 개발독재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실체(민본)민주주의를 외면한 잘못을 범하기도 했다.

보수의 가치와 정향(定向)을 혁신 준거로 삼아야 한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와 덕치(예치)의 병행, 세계주의 등 네 가지로 대별된다. 보수의 정향(定方)도 네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역사를 존중하고 현실에 기초해 미래를 지향함에 따라 연속성을 담보한다. 둘째, 유연성과 실용에 무게를 둔다. 셋째,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변화를 선호한다. 넷째, 애국심과 구심력을 강조한다. 요컨대 보수는 대응(Responsive)보다 책임(Responsible)을 중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파의 혁신 방향은 세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우파 본연의 가치인 '공동체자유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정론에 따른 정책 마케팅에 진력해야 한다. 둘째, 중도실용 기조로 사회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응에 치중하는 '여민(與民)과 책임을 부각하는 '위민(爲民)이 조화를 이룬 세종(世宗)의 '여의(與議)정치를 본받아야 한다. 지역·세대·소득계층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생활정치 구현과 현장정책 개발 역시 강화돼야 한다. 셋째, 체계적으로 지도자를 육성하고 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I. 보수의 공과

2017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이었다. 소통(대응) 리더십은 국민 요구(중론)에 부응하는 것이 핵심이고, 책임 리더십은 지속 가능한 올바른 결정(정론)이 요체다. 이런 관점에서 보수진영의 공(功)은 계승하되 과(過)를 바로잡아야 한다.

광복 이후 보수진영의 업적은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근대국가를 수립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굳건히 수호하였다. 1949년 농지개혁으로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전환되면서 '국민 형성'의 기초를 닦았고, 초중등교육의 보편화로 문맹을 퇴치하였다.

둘째, 압축 산업화에 따른 절대빈곤 탈출, 계층 이동 활성화와 중산층 형성은 보수진영의 가장 큰 공(功)이다. 2015년 OECD 『Tax Database』에 의하면 한국의 1인 가구 구매력 기준 순소득(net take-home pay)은 OECD 5위, 4인 가구는 9위에 이르러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아졌고 우리 경제력은 북한의 45배로 불어났다. 중산층이 확대되고 소득 분배도 개선되었다.

셋째, 민주화와 세계화를 차례로 이뤄내 국격이 상승하였다. 절차(선거)민주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세 차례 수평적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영국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16년 '민주주의지수'는 세계 24위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다. 경제영토는 세계 2위, 대외교역은 7위에 각각 이르렀으며, OECD와 G20에 가입하고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한 첫 사례가 되었다. UN개발계획(UNDP)의 2015년 '인간개발지수'는 17위에 올라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높고, 영아 사망, 유아 취원과 고등교육 이수는 세계 최상위권 수준에 달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인구가 5천만 명을 넘는 일곱 번째 국가로 등극하기도 했다.

문제는 보수진영의 잘못이다. 이 역시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권위주의 통치다. 반공(反共)과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기본권을 억압하는가 하면, 공권력을 남용하고 때로는 사유화하였다. 숙의와 공론을 제한하였다. 정쟁, 지역감정, 노사 갈등과 이념 대립이 확산되면서 사회통합이 요원해졌다.

둘째, 정부주도의 개발독재로 정부만능주의가 팽배해졌고 자기책임원칙이 이완되면서 민간 활력이 약화됐다. 정경유착의 폐해와 함께 정부실패와 신뢰적자가 누적되었다. 공직, 언론, 학계, 시민사회, 문화예술계와 종교계의 과잉정치화를 불렀다.

셋째, 실체민주주의 또는 민본(民本)민주주의의 외면도 큰 허물이다. 고무줄 잣대와 인치(人治)에 의존하여 법치주의가 훼손되었고, 중앙 주도의 획일적 동원체제의 잔재 때문에 분권과 자율은 여전히 미흡하다.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대중요법과 땀질 처방이 만연해졌고, 기회 균등의 구현에 소홀하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계파패권주의와 뺄셈정치에 집착하고 국민복지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였다. 아울러 지역과 세대의 편중 현상, 엘리트 중심의 좁은 인재 풀 등으로 대중기반이 취약하고 기부와 봉사 등 상류층의 도의적 책무(Noblesse Oblige) 문화도 열악해졌다.

미국 Heritage재단이 2017년 발표한 『경제활동 자유도』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100점을 기준으로 자유경제권이 평균 83.9점인데 비해 한국은 71.7점으로 12점 가까이 차이가 난다. 2015년 한국의 농가소득 중 정부지원 비중은 52%에 달해 OECD 평균인 18%보다 훨씬 높다. 2016년 GDP 대비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정부보증의 비율도 OECD에서 3번째로 높다. 이처럼 민간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OECD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은 보수가 국정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이다.

II. 보수의 가치와 정향(定向)

보수의 가치와 정향을 혁신의 준거로 삼아야 한다. 보수는 네 가지의 가치를 추구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다. 보수는 인간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개인

의 자유를 존중하고 인식론적 상대주의에 입각해 이견(異見)을 경청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성을 인정하는 점에서 획일적인 전체주의와 구별된다. 참여를 중시하는 여민(與民)과 책임에 무게를 둔 위민(爲民)이 조화를 도모해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둘째, 시장경제다. 보수는 자율, 창의, 경쟁을 통해 다양성을 보장하며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동기 부여와 유인(誘因)을 중시하며,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 균등, 공정한 규칙과 질서의 확립을 지향한다. 패자부활을 촉진하고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셋째, 법치와 덕치(德治) 혹은 예치(禮治)의 병행이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규율로 자유를 제한하는 '낮은 길'의 법치와 자정(自淨) 또는 절제하는 '높은 길'의 덕치(德治) 혹은 예치(禮治)를 병행한다. 상류층의 도의적 책무 이행과 신뢰와 투명성 등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확충은 후자에 속한다.

넷째, 세계주의이다. 문호를 개방하고 배타적·국수적 민족주의를 배격한다. 인종, 종교, 지역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연대의식과 인류애를 함양함으로써, 기아, 질병, 기후 변화, 인종 갈등, 전쟁 등 지구촌의 난제 해결에 솔선수범한다.

보수의 정향도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역사를 존중하고 현실에 기초해 미래를 지향함에 따라 최소한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에 바탕을 두고 유산을 승계하며, 거시·장기 시계(視界)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 요컨대 보수는 대응(Responsive)보다 책임(Responsible)을 중시한다. 당대에 충실한 '어진 재상'보다 후대까지 내다보는 '현명한 재상'을 더 높이 여기는 셈이다.

둘째, 3백년 넘게 이어온 영국 보수당처럼 포용력, 유연성, 창의성과 실용성을 중시한다. 이는 중용(中庸)에 나오는 이동하는 '시중'(時中), 울곡(粟谷)의 '시무'(時務)와 궤를 같이 한다. '따뜻한 보수', '창조적 자

본주의'나 '녹색성장' 등은 보수의 이런 면모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셋째, 점진적이고 질서 있는 변화를 선호한다. 보수는 Big Bang의 반작용, 혁명에 수반하는 가혹함과 불공정성을 경계한다. 넷째, 애국심과 구심력을 강조한다. 19세기 영국 보수당 Benjamin Disraeli 수상이 '하나의 국민'(One Nation)을 내세워 통합을 강조한 것은 이런 범주에 속한다.

III. 우파의 혁신

이상의 맥락에서 우파의 혁신 방향은 세 가지로 모아진다. 첫째, 우파 본연의 가치인 '공동체자유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중론을 좇는 정치공학보다 정론에 따른 정책 마케팅에 진력해야 한다. 인기엔 영합하거나 특정이익을 추구하는 Pork-barrel, Log-rolling과 지대 추구를 최소화해야 한다. 전문가의 관여, 검증, 중재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합리적 무관심과 불합리한 편견을 제어해야 한다. 5년 단임 국정의 근시안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 교육, 에너지 등 백년대계가 절실한 분야에는 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들의 임기는 10년 이상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울러 법치와 Noblesse Oblige를 확립해야 한다.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예외 없이 지키도록' 해야 한다. 독일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1위 해리포터, 2위 민법, 6위 노동법, 9위 상법 등이 올라있다. 독일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0년 한국에선 조세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정부지출의 효율은 하락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악화된 정도가 가장 심하다.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무책임하게 인기엔 영합하여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실업률이 높을수록 EU에서 이탈하려는 '반체제정당'의 지지율이 높다. 2016년 영국의 EU 탈퇴(Brexit) 국민

투표 결과에서도 이런 경향이 드러났다. 우리의 경우 2008년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때 침소봉대와 사실 왜곡이 기승을 부렸다.

최상위 10%의 평균소득에서 최하위 10%의 평균 소득을 나눈 값인 '시장소득 10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영국은 36배인데 한국은 16배로 우리가 양호하다. 하지만 '소득세 10분위 배율'은 영국이 43배인데, 한국은 무려 750배에 이른다. 새 정부도 최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처럼 표심을 의식해 고소득층 위주로만 세금을 매기면 정책 의도와 달리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세수효과는 미흡해 계속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나아가 우파는 정부 입김을 축소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경제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Karl Marx는 버리고 Adam Smith 쪽으로 옮겨와야 한다. 관치·관제·관변경제와 조장행정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시장친화규제를 확산하고 선진국표준을 수용·창출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면허·감독·평가·지원에 편승한 기득권과 지대를 줄여야 한다. 여건 변화에 걸맞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역할 축소와 민영화도 필요하다.

둘째, 중도실용 기조로 사회통합을 도모해야 한다. '중도주의'는 근세 유럽의 종교개혁에 이은 정교분리 때 태동된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논거다. 독일은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패한 교훈으로 승자 독식을 차단하고 과반의석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양보와 포용의 연정(聯政)이 정착되고 국정 연속성을 높였다. '옹호연맹'의 원리·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개방과 소통의 협치(協治)로 이견을 아우르는 창의적인 '제3의 대안' 개발에 힘써야 한다. 대응에 치중하는 '여민'(與民)과 책임을 부각하는 '위민'(爲民)이 조화를 이룬 세종(世宗)의 '여의'(與議)정치를 본받아야 한다. 지역·세대·소득계층의 저변을 넓히고 그 공통분모를 탐색해야 한다.

규범·문화·제도를 시대에 따라 발 빠르게 갱신

하는 실용 노선도 절박하다. '제4차 산업혁명'과 Gig Economy의 진전에 적응하고 나아가 선도할 수 있도록 연공서열, 전일제 근로 등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전과 전략 못지않게 '기회의 창', 뇌관, 가교, 임계점, 우발계획, 경과조치, 시범 적용 등 '변화관리'의 '경세술'(Statecraft)도 천착해야 한다. 생활정치 구현과 현장정책 개발 역시 강화돼야 한다. 고담준론이 탁상공론에 그쳐선 안 되고 경험주의와 실사구시를 추구해야 한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창제, 농사직설(農事直設)·의방유취(醫方類聚) 편찬, 자격루(自擊漏) 보급과 노비 출산휴가 부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었다. 제5공화국의 야간 통행금지 해제와 중·고교 교복 자율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중교통체계 혁신과 미국 방문비자 면제 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끝으로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과 시민교육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독일 국민이 뽑은 '정직한 인물 10인' 중 1~6위는 Helmut Schmidt 전 수상을 비롯한 정치인들이다. 선진국처럼 일찍 정계에 입문해 현장을 두루 경험하면서 혜안(비전과 식견), 열정(애민과 창도)과 도량(조율, 통합과 후사)의 리더십을 익힌 전문정치인을 길러내야 한다. 우파 열세지역과 취약계층 중심의 탕평과 세대교체도 불가피하다. 국민의 의식과 문화 등 사회자본도 확충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정당의 연수와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싱크탱크의 자생력도 보강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지만, 파국으로 치닫는 변곡점이기도 하다. 역사가 웅변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